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내정자 연석회의에서 상임위원장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임위 선출 강행에 보이콧 맞선 통합당

21대 국회 개원초부터 파행

민주당, 법사위 등 6곳 선출 강행 이번주 18개 상임위 원구성 마칠 것

통합당, 상임위원 '일괄사임'에 상임위원장 선출 사실상 불가능

21대 국회가 개원 초기부터 파행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면서다.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미래통합당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은 15일 정의당, 열린민주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 등 범여권 세력과 합세해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섰다.

민주당은 전날(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윤호중)·기획재정위원회(유호덕)·외교통일위원회(송영길)·국방위원회(민홍철)·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학영)·보건복지위원회(한정애) 등 6곳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쳤다. 해당 상임위에 대한 당별 상임위원 배정도 마쳤다. 통합당은 이에 반발하며 '상임위 일정 보이콧'을 시작했다.

통합당은 이와 함께 전날(15일) 본회의에서 배정된 상임위원에 대해 '일괄사임'하기로 했다. 상임위 6곳에 배정된 통합당 의원 45명은 국회 의사과에 상임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소속 의원에게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된 개별 의원들의 상임위원 보임을 일괄 사임코자 하오니, 참고해 주기 바란다"고 전달한 데 따른 조치다.

반면, 민주당은 19일까지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칠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6개 상임위 가동으로 는 시급한 코로나 위기 대응에 턱없이

부족하다. 금주 안으로 18개 전 상임위에 대한 원 구성을 마치고 추경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통합당이 추가 원 구성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상임위 배정'을 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요일(19일)까지는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가고 같이 가겠다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또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며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야당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야당에 양보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고민을 진지하게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통합당 반발에도 남은 상임위원장 선출에 원 구성을 마무리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병석 의장이 상임위원장 배분 기준을 11(민주당)대 7(통합당)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서 의석 배분에 따라 여야가 11대 7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여야가 분리해 맡아야 한다고 세 차례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즉, 통합당이 원 구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장 선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이와 관련해 통합당 소속 3선 이상 의원들은 "법사위원장 배분이 안 되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려놓겠다"고 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우선 통합당과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우리당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하겠다. 오늘(16일) 김 원내대표가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연락을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항공사 등 무선국 검사수수료 전액면제

과기정통부, 전파법 시행령 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 지원을 위해 무선국 및 전파 응용설비 검사수수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검사수수료는 전파를 송·수신하는 무선국의 전파 혼·간섭 방지를 위해 기술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시설자가 과기정통부로부터 검사를 받고 납부하

는 비용이다. 과기정통부는 일부 무선국에 대한 2020년도 검사수수료를 전액 감면하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검사수수료 감면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검사하는 무선국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소형 어선 선주 및 경영상 피해를 입은 항공사 등이 운용하는 무선국을 대상으로 한다. /채윤정 AI전문기자

ICT 석박사 등 인재양성... 신산업 육성

과기정통부, 9개 대학 230명 참여 고려대·성균관대 등 최장 10년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석박사 창의 인재양성을 본격 지원해 신산업 육성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ICT 환경변화에 대응해 대학원의 교육·연구과정 혁신을 통한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ICT 명품인재 양성' 추진 2개 대학 및 'ICT 혁신인재 4.0' 추진 7개 대학을 신규 선정하고 본격 지원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매년 9개 대학 약 230명의 석·박사생이 과제 수행에 참여하게 돼 향후 혁신성장을 견인할 ICT 창의·융합형 고급인재로 양성될 것으

로 기대된다.

'ICT명품인재양성'은 도전적·모험적 미래기술 연구와 교육 운영을 위해 1차년도는 15억원을 투입하고 2차년도부터 연 30억원 수준으로 최장 10년간(4년+3년+3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고려대와 성균관대가 선정됐다.

고려대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의료 초지능 분야와 관련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고난도 기술 개발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의료 인공지능(AI)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자기주도적 양방향 교과 편성, 글로벌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한 질적 평가 등을 창의적 교육과정에 포함해 운영할 예정이다.

성균관대는 미래 사회의 스마트하고 능력이 증강된 신인류를 만들기 위해 두뇌·신경 이식형 컴퓨터 인터페이스

구축 등 기계와 사람간 상호 연결 확대 수단 등 관련 기술연구와 함께 인문·의료·공학의 융합 교과목 편성, 팀 티칭 등 교육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ICT혁신인재양성4.0'은 기존 일방향적인 교과 수업방식에서 벗어나 기업·대학이 공동으로 기업 현장문제 기반의 연구·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함으로써 실전 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ICT 분야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는 신규 사업이다. 이번에 건국대, 국민대, 단국대, 부산외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포항공대 등 7개 대학, 11개 과정을 선정했으며, 선정된 대학은 1개 과정 당 연간 2억5000만원 수준(1차년도 1억 2500만원)으로 최장 5년간(3년+2년)을 지원받게 된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올여름 폭염 2배 증가... 축산농가 재해피해 선제대응

농식품부, 축산분야 재해 대응계획 축사환경 관리 현장기술 지원 추진

올 여름 평균 기온이 전년보다 높고, 폭염 발생일수도 전년도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축산농가 재해 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폭염, 태풍,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해로 인한 축산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0년 축산분야 재해 대응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매년 여름철엔 폭염과 무더위로 가축폐사와 생산성 저하 등 축산분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장마나 태풍으로 인한 축사시설 파손과 침수 피해도 크다.

특히, 올해 여름은 평균 기온이 작년보다 높고, 폭염 발생일수가 전년 13.3일의 2배인 20~25일로 전망되는 등 극심한 더위가 예고되고 있어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고, 태풍은 2~3개가 국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4일 오전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중구청 관계자들이 살수차를 이용해 뜨거워진 도로에 물을 뿌리며 열기를 식히고 있다. /뉴스1

농식품부는 여름철 폭염 등 재해피해 최소화를 위해 폭염 등 기상 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문자로 알리고, 피해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요령 등을 농가에 제공하는 한편,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지자체와 협조해 6~8월까지 전국 9개 권역을 대상으로 축사환경 관리 현장 기술지원을 추진한다.

폭염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7월6일~8월7일까지는 축산분야 중점 기술지원단을 별도 편성해 폭염 피해가 심각하거나 장기화 우려되는 지역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컨설팅

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폭염 등 여름철 재해 대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추가 소요가 있는 농가에 대해 지자체를 통해 이달 2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아 지원키로 했다.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정부의 기상안내와 폭염 피해 예방 요령을 숙지해 폭염 등 재해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축 사양관리와 축사, 퇴비사, 분뇨 및 전기안전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용수 기자 hys@

KS인증 보유기업 91% "제품 매출 향상"

산업부, 2019 산업표준화 실태조사 기업 49%, 매출향상 비율 10~30%

KS인증을 보유한 기업 10곳 중 9곳은 인증 제품을 통한 매출 향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대다수 기업들은 표준 전담 부서가 없었고, 전문 인력 부족으로 표준 활용에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전국 10인 이상 제조업체 중 중소기업 894개사, 중견기업 90개사, 대기업 16개사 등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9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실태조사에서 KS인증 보유 기업 중 90.8%는 인증 제품을 통한 매출 향상이 있다고 응답했고, 매출향상 비율이

10~30%라는 기업이 49.2%에 이르는 등 KS인증이 해당제품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S인증을 통해 제품의 신뢰도와 품질 제고는 물론, 공공기관 납품 등의 효과가 매출향상으로 이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KS인증제품은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라 제약경쟁·지명경쟁 입찰이 가능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검사·형식승인 등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업의 표준업무가 매출 향상에 기여하지만, 별도 표준부서를 운영하는 기업은 1.2%로 극히 저조했고, 주로 품질관리 또는 사무·경영부서가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업무 수행 인원에 중소기업은 평균 1.9명, 중견기업 7.4명, 대기업 69.9명 등 기업규모별 차이도 컸다. /한용수 기자

멧돼지 폐사체 수색에 GPS도입... 관리 강화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환경부는 수풀 우거진, 장마철 도래 등 여름철 여건 변화에 대응해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울타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먼저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에 위치정보시스템(GPS)을 도입한다.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초기부터 폐사체 수색 전담팀을 운영해 폐사체 제거에 나서고 있으나, 최근 발견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 개체수 감소 영향도 있으나 수풀이 우거져 수색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돼, 환경부는 수색 인원에 수색 인력 동선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정보시스템 장비를 지급해 체계적인 수색에 나서기로 했다.

/한용수 기자